

文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G20서 불씨 살린다

교황에 “방북시 평화 모멘텀될 것”
EU에 한반도 평화 지지·협력 요청
배우자 프로그램서 평화 지지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참여를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와 교황의 방북 제안 등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재확인하며 ‘중전 선언’ 등 남북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



G20 정상회의를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30일 오후 이탈리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총리 내외, 문 대통령 내외, 마타렐라 대통령과 딸 라우라. /뉴시스

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다.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에 교황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교황의 방북도 유야무야 됐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는 30일 로마 루블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G20 공식 환영식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날(29일)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등의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과 나눴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며 화답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이어진 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측 간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도 주목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과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지 필요한 역할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외교에는 부인 김경숙 여사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30일(현지시간)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

에 참석해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프랑스 브리짓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는 “교황님을 만나 뵙고 종전 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글로벌 이슈들과 봤을 때 대한민국은 미래 초석을 위한 전환기에 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기후외교, 경제외교, 평화외교라는 3대 외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외교”라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공천 협박에 지지자간 몸싸움까지

국민의힘 본경선 과열… ‘원팀’ 가능할까

국힘 대선후보 간 감정싸움 격화
지지자 몸싸움에 부상 입기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 간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공천 협박’ 논란으로 후보들끼리 치고받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췌사나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본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캠프와 홍준표캠프는 최종 본경선 결과를 앞두고 서로 패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갈등을 키운 것은 이른바 ‘공천 협박’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은 10월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한글로, 익명의 글쓴이는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캠프의 주요영선대위원장과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공천 등을 빌미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라고 독촉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상대 캠프 중진들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덧발 중진들이 정치 초보자 앞에서 굽신대면서 무엇을 더 하겠다고 비굴한 행동을 보이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윤석열캠프를 겨냥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며 “지금 익명의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형사고발을 통해 작성자와 경위를 명명



윤석열(왼쪽부터),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경선 일대일 맞추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백백히 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하며 당을 망친 장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중상모략을 하십니까”라며 홍 후보는 비판했다.

윤석열캠프는 홍 후보의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주지않겠다’는 공천 협박 발언을 빌미로 역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지지행사가 예정된 경기도 포천에서 당협위원장이 또 다른 당원 행사를 예고한 데에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김병민 윤석열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대놓고 공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구태 정치 청산을 원하는데 홍 후보는 제왕이라도 된 양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도 몸싸움이 일어나 지지자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의 충돌은 30일 저녁 발생했다. 마지막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벌어질 여의도 KBS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

다. 권성주 유승민캠프 대변인은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유승민 후보 지지자가 일제감치 현장에서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 후보 지지자가 뒤늦게 자리를 침범하려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유 후보 여성 지지자를 완력으로 넘어뜨리고 청년 지지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지난 27일 강원 토론회 응원현장에서도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자리를 침범해 목을 팔꿈치로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다”며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원팀’ 대해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는 앞으로도 토론이나 행보에도 원팀을 생각하는 기조로 움직인다”며 “윤석열캠프에 있으신 분들도 다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을 저해하는 해당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내년도 ‘604.4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

올해 558조 대비 8.3% 가량 증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내달 2일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604조4000억원 규모 슈퍼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신(新)양극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와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예산(558조원) 대비 8.3%가량 증가한 604조4000억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내년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도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예결특위는 오는 5일과 8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9~10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 11~12일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면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 등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604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인만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22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여야

가 대신 체제로 빠른 전환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지만,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단 한 차례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우려하면서도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26일 “정쟁 국감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604조4000억원의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예산이 총망라되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강조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용으로 포퓰리즘이나 선거용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